

보도 일시	2022. 5. 19.(목) 10:00	배포 일시	2022. 5. 19.(목) 8:00
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

담당 부서 <총괄>	재정혁신국	책임자	과 장 공 석
	재정건전성과	담당자	사무관 김민형 (kminh@korea.kr)
		담당자	사무관 김민호 (jadelake@koea.kr)

「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」 2022년 5월호(22.3월 말 기준)

□ **(총수입)** 고용·수출 증가세 등으로 국제·세외수입이 증가하여 1분기 총수입 진도율은 전년동기 대비 4.1%p 증가한 30.8%

* 1분기(조원) : <총수입>170.4(+18.2) <국제>111.1(+22.6) <세외>11.0(+0.9) <기금> 48.3(△5.2)

□ **(총지출)** 감염병위기대응,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 등으로 1분기 총지출 진도율은 전년동기 대비 2.3%p 증가한 32.6%

* 1분기(조원) : <총지출>203.5(+21.3) <일반>115.9(+13.6) <특별>21.2(+0.4) <기금> 66.4(+7.3)

□ **(수지·채무)** 1분기 관리재정수지는 △45.5조원 적자로 전년 동기 대비 3.1조원 개선, 사보기금수지 흑자폭 축소에 따라 통합재정수지 적자폭은 확대(△3.0조원)

○ 1분기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981.9조원으로 '21년 결산 대비 42.8조원 증가

⇒ 연말까지 수지·채무는 2차 추경 전망* 수준으로 관리 예정

* '22년 재정전망(조원) : <관리재정수지> △108.8 <국가채무> 1,067.3

□ **(총수입)** 고용·수출 증가세 등으로 국제·세외수입이 증가하여 총수입 진도율은 전년동기 대비 4.1%p 증가한 30.8%

① (국제) 1분기 국제수입은 111.1조원(누계)으로 전년동기 대비 22.6조원 증가, 세입예산(343.4조원) 대비 진도율 32.3%

- 소득세는 고용회복 등에 따라 근로소득세 중심으로 전년동기 대비 6.7조원 증가

* 상용근로자수(월평균, 만명): ('20.12~'21.2) 1,463 → ('21.12~'22.2) 1,533 <+4.8%>

- 법인세는 경기회복에 따른 기업실적 개선* 등에 따라 전년동기 대비 10.9조원 증가

* 코스피 12월 결산법인 영업이익(조원, 개별) : ('20) 67.5 → ('21) 106.8 <+58.2%>

- 부가가치세는 소비수입 증가*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4.5조원 증가

* 소매판매액지수(전년동기대비, %) : ('21.3분기) +5.6, ('21.4분기) +6.4
수입액(억불) : ('21.1~2월) 868.6 → ('22.1~2월) 1,132.9 <+30.4%>

- 교통세는 유류세 인하 등에 따라 전년동기 대비 △1.5조원 감소

* 휘발유·경유에 대한 유류세 20% 한시인하('21.11.12~'22.4.30)

② (세외수입) 1분기 세외수입은 11.0조원(누계)으로 한은잉여금 정부납입액 증가(+0.4조원)*, 과징금** 수입 증가(+0.2조원)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0.9조원 증가, 진도율 42.2%

* 한은잉여금 정부납입액(조원) : ('21) 5.1조원 → ('22) 5.5조원

** 구글엘엘씨 등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 (공정위,+0.2조원)

③ (기금수입) 1분기 기금수입은 48.3조원(누계)으로 보험료수입 증가에도 자산운용수입이 감소해 전년동기 대비 △5.2조원 감소, 진도율 26.2%

- (보험료수입 등) 국민연금기금, 고용보험기금 가입자 수* 증가로 사보기금 보험료 수입 증가

* 전년동기 대비 1분기 국민연금 가입자수 증가(월평균, 만명) : ('22) +28
고용보험 가입자수 증가(월평균, 만명) : ('22) +54

- (자산운용수입) 자산 시장 호황에 따른 이례적 실적을 기록한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나 평년 수준 상회

* 1분기 기금 자산운용수입(조원, 누계) : ('18) 5.2 ('19) 4.8 ('20) 5.9 ('21) 15.7 ('22) 8.8

(단위: 조원, %, %p)

	'21년				'22년(잠정)				전년동기 대비					
	추경 (A)	결산 (B)	3월 (C)	3월 (누계D)	진도율		추경** (G)	3월 (H)	3월 (누계I)	진도율 (J=I/G)	3월 (H-C)	누계 (I-D)	진도율	
					추경 (E=D/A)	결산 (F=D/B)							예산 (J-E)	결산 (J-F)
□ 총수입	514.6	570.5	55.0	152.1	29.6	26.7	553.6	64.3	170.4	30.8	9.2	18.2	1.2	4.1
◇ 국세수입	314.3	344.1	30.7	88.5	28.2	25.7	343.4	41.1	111.1	32.3	10.4	22.6	4.2	6.6
○ 일반회계	304.6	332.5	29.9	86.1	28.3	25.9	333.0	40.4	108.8	32.7	10.5	22.7	4.4	6.8
- 소득세	99.5	114.1	4.8	28.6	28.8	25.1	105.8	4.9	35.3	33.4	0.0	6.7	4.6	8.3
- 법인세	65.5	70.4	17.3	20.2	30.8	28.7	74.9	27.0	31.1	41.5	9.6	10.9	10.7	12.8
- 부가가치세	69.3	71.2	1.4	17.6	25.4	24.7	77.5	2.3	22.1	28.5	0.9	4.5	3.1	3.8
- 교통세	15.7	16.6	1.7	4.7	30.1	28.4	15.4	0.9	3.2	20.8	△0.8	△1.5	△9.2	△7.6
- 관세	8.3	8.2	0.7	1.7	20.7	21.0	8.7	1.0	2.8	32.5	0.4	1.1	11.8	11.5
- 기타	46.2	52.0	4.0	13.3	28.7	25.5	50.6	4.3	14.3	28.3	0.4	1.1	△0.4	2.8
○ 특별회계	9.6	11.6	0.8	2.4	24.5	20.4	10.4	0.7	2.2	21.5	△0.1	△0.1	△3.0	1.1
◇ 세외수입	29.3	30.5	2.0	10.1	34.6	33.2	26.1	2.1	11.0	42.2	0.1	0.9	7.6	9.1
◇ 기금수입	171.0	195.8	22.4	53.5	31.3	27.3	184.1	21.1	48.3	26.2	△1.3	△5.2	△5.1	△1.1
(사보기금*)	99.5	124.5	14.9	35.3	35.5	28.3	104.8	13.4	29.2	27.9	△1.5	△6.1	△7.6	△0.5
◇ 세입세출 외	-	0.1	0.0	0.0	-	-	-	0.0	0.0	-	0.0	0.0	-	-

* 국민연금기금,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기금, 고용보험기금,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

** 1차 추경 기준으로 2차 추경은 국회 통과후 반영

□ **(총지출)** 감염병위기대응,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 등으로 총지출 진도율은 전년동기 대비 2.3%p 증가한 32.6%

○ (예산) 코로나 확진자수 증가에 따라 코로나 대응 사업 중심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.0조원 증가, 진도율은 32.9%

* 월별 신규확진자 수(백만명) : (2월) 2.3 (3월) 10.0 (4월) 4.1

○ (기금)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등 신속 집행 결과 전년동기 대비 7.3조원 증가, 진도율은 32.1%

(단위: 조원, %, %p)

	'21년				'22년(잠정)				전년동기 대비					
	추경 (A)	결산 (B)	3월 (C)	3월 (누계D)	진도율		추경** (G)	3월 (H)	3월 (누계I)	진도율 (J=I/G)	3월 (H-C)	누계 (I-D)	진도율	
					추경 (E=D/A)	결산 (F=D/B)							예산 (J-E)	결산 (J-F)
◇ 총지출	604.9	600.9	72.4	182.2	30.1	30.3	624.3	82.3	203.5	32.6	9.9	21.3	2.5	2.3
○ 예산	409.7	398.9	42.3	123.1	30.0	30.9	417.2	56.5	137.1	32.9	14.1	14.0	2.8	2.0
- 일반회계	348.8	339.7	33.6	102.3	29.3	30.1	354.4	44.8	115.9	32.7	11.2	13.6	3.4	2.6
- 특별회계	60.9	59.1	8.7	20.8	34.2	35.2	62.8	11.6	21.2	33.8	2.9	0.4	△0.4	△1.4
○ 기금	195.2	199.6	30.1	59.1	30.3	29.6	207.1	25.9	66.4	32.1	△4.2	7.3	1.8	2.4
(사보기금*)	63.2	64.4	6.0	16.8	26.6	26.1	64.8	6.0	16.9	26.1	△0.0	0.1	△0.5	0.0
○ 세입세출 외	-	2.5	0.0	0.0	-	0.1	-	-	-	-	△0.0	△0.0	-	△0.1

* 국민연금기금,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기금, 고용보험기금,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

** 1차 추경 기준으로 2차 추경은 국회 통과후 반영

□ **(재정수지)** 1분기 관리재정수지는 △45.5조원 적자로 전년동기 대비 3.1조원 개선

○ 통합재정수지는 사보기금수지 흑자폭 축소*에 따라 전년동기 대비 적자폭이 확대(△3.0조원)

* 1분기 사보기금수지(조원, 누계) : ('19) 7.9 ('20) 10.0 ('21) 18.5 ('22) 12.3 [△6.2]

(단위: 조원, %, %p)

	'21년				'22년(잠정)				전년동기 대비					
	추경 (A)	결산 (B)	3월 (C)	3월 (누계D)	진도율		추경** (G)	3월 (H)	3월 (누계I)	진도율 (J=I/G)	3월 (H-C)	누계 (I-D)	진도율	
					추경 (E=D/A)	결산 (F=D/B)							예산 (J-E)	결산 (J-F)
◇ 총수입(A)	514.6	570.5	55.0	152.1	29.6	26.7	553.6	64.3	170.4	30.8	9.2	18.2	1.2	4.1
◇ 총지출(B)	604.9	600.9	72.4	182.2	30.1	30.3	624.3	82.3	203.5	32.6	9.9	21.3	2.5	2.3
◇ 통합재정수지(C=A-B)	△90.3	△30.4	△17.4	△30.1	-	-	△70.8	△18.1	△33.1	-	△0.7	△3.0	-	-
◇ 사회복지성기금*수지(D)	36.2	60.1	8.9	18.5	-	-	40.0	7.4	12.3	-	△1.5	△6.2	-	-
◇ 관리재정수지(E=C-D)	△126.6	△90.5	△26.3	△48.6	-	-	△110.8	△25.5	△45.5	-	0.8	3.1	-	-

* 국민연금기금,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기금, 고용보험기금,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

** 1차 추경 기준으로 2차 추경은 국회 통과후 반영

□ **(국가채무)** 1분기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981.9조원으로 '21년 결산 대비 42.8조원 증가

※ 지방정부 채무는 연 1회 산출, 월간 재정동향에는 중앙정부 채무만을 산출·공개

○ 전년말 대비 국고채 잔액은 42.0조원(발행 53.3조원, 상환 11.3조원), 주택채 잔액은 0.6조원(발행 3.9조원, 상환 3.2조원), 외평채 잔액은 0.2조원* 증가

* 환율상승에 따른 외평채 원화 평가금액 상승분

(단위: 조원)

	'21년 결산	'22년(잠정)	
		1차추경	1분기
○ 중앙정부 채무	939.1	1,044.6	981.9
■ 국채*	937.0	1,042.6	979.9
- 국고채권	843.7	948.4	885.7
- 국민주택채권	82.2	82.1	82.8
- 외평채권(외화)	11.2	12.0	11.4
■ 차입금	2.0	2.0	2.0
■ 국고채무부담행위	0.1	0.1	0.1

* 국제기구출자전환증권 94억원 포함

□ (국채시장 동향) 4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8.9조원(경쟁입찰 기준 14.6조원)

① 인플레이션 우려에 따른 주요국 통화긴축, 러-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영향으로 올해 들어 국고채 금리가 큰 폭 상승하고 시장 변동성 확대

- 4월 중순 이후 금통위 개최, 추경안 제출(5.13) 등으로 정책 불확실성이 완화되었으나, 글로벌 인플레이션 지속에 따른 불안요인 상존

* 3년물(% 기말) : ('21)1.798 ('22.1)2.189 (2)2.242 (3)2.663 (4)2.958 (5.16)3.046
10년물(% 기말) : ('21)2.250 ('22.1)2.586 (2)2.675 (3)2.969 (4)3.242 (5.16)3.277

② 1~4월 누적 국고채 발행량은 72.1조원 기록(연간 총 발행한도의 40.7%)

- 4월 국고채 발행실적은 총 18.9조원(경쟁 14.6조원) 수준이며, 4월 초에 크게 하락했던 응찰률은 4월 중순 이후 점차 회복 중

③ 외국인의 국고채 순투자자는 4월 중 2.2조원으로 37개월 연속 순유입을 지속하면서, 외국인 국고채 보유액도 4월말 174.8조원으로 역대 최고

* 外人 원화채 순투자(조원): ('20)+26.5 ('21)+63.9 ('22.1월)+3.7 (2월)+4.2 (3월)+0.6 (4월)+0.7
外人 국고채 순투자(조원): ('20)+23.3 ('21)+42.5 ('22.1월)+4.3 (2월)+3.3 (3월)+1.0 (4월)+2.2

< 국고채 관련 주요 통계 >

(조원, %)		'21년말	10월	11월	12월	'22.1월	'22.2월	'22.3월	'22.4월
발행잔액(조원)		843.7	841.9	848.1	843.7	858.7	877.6	885.7	904.3
발행액(조원)		180.5	12.8	10.4	5.8	15.4	19.3	18.5	18.9
평균 조달금리*(%)		1.79	2.18	2.26	2.10	2.31	2.52	2.61	3.15
응찰률(%)		283%	278%	291%	277%	277%	277%	268%	254%
외국인 국고채	보유잔액(순투자)	164.1(+42.5)	(+2.3)	(+2.6)	(+4.6)	168.4(+4.3)	171.6(+3.3)	172.6(+1.0)	174.8(+2.2)
	보유비중	19.4%	18.7%	18.8%	19.4%	19.6%	19.7%	19.5%	19.3%

* '21년 말의 경우 '21년 평균 조달금리, 그 외 월평균 조달금리

<붙임>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2022년 5월호(배포용)



담당 부서 <총괄>	재정혁신국 재정건전성과	책임자	과 장 박철건 (044-215-5740)
<국세수입>	세제실 조세분석과	책임자	과장 김민호 (044-215-4120)
		담당자	사무관 박병선 (ghibli80@korea.kr)
<집행실적>	재정집행특별점검단 집행전략과	책임자	과장 문상호 (044-215-5330)
		담당자	사무관 김선애 (kimsunae1004@korea.kr)
<국채시장>	국고국 국채과	책임자	과장 장보현 (044-215-5130)
		담당자	사무관 이상아 (s3253a@korea.kr)

참고

5월호 주요재정이슈 요약

※ 기고문을 자체 요약한 자료이며, 전체본은 「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5월호」(붙임에 게재)

① 그 간의 국유재산 개발현황 및 향후 정책방향
(기획재정부 국유재산조정과장 류중재)

① (배경) 국유재산 정책방향은 '90년대 보존·유지 중심에서 '00년대 이후 효율적인 활용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로 전환되었음

- '04년 공공기관에 위탁해 개발하는 위탁개발제도에 이어 '11년 이후 민간참여개발제도와 국유재산관리기금을 활용하는 기금개발제도를 도입함
- '17.8월 국유지를 활용해 공공주택, 산업육성단지 등을 조성하는 새로운 국유재산 정책방향을 발표해 추진 중

② (추진현황) 노후 청·관사를 단순 재건축하던 것에서 벗어나 청사와 주택, 창업공간, 생활SOC 등을 함께 짓는 복합개발과 대규모 토지개발을 추진 중

- (복합개발) 도심 우수한 입지에 청·관사와 청년·신혼부부를 위한 저렴한 공공주택을 마련하는 16개의 사업(2.1조원, 총 약 3,000호 규모) 추진 중

* 현재 광주 동구 복합청사가 완공되어 청년들을 위한 총 24호의 숙소 제공 중

- 청사가 위치한 곳의 관할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중앙정부 청사와 지역 주민이 원하는 생활SOC를 복합건립하는 사업도 추진 중

* '21.12월 도봉구와 도봉세무서+수영장+헬스장을 건립하는 시범사업 협약체결

- (토지개발) 교정시설 등 대규모 국가시설 이전으로 유휴가 된 국유지에 공공주택, 산업육성공간을 조성하는 16개 사업(공공주택 약 2만호) 추진 중

- 현재까지 7곳의 사업계획이 승인되었으며, 9곳의 사업계획도 검토 중

* (예) 의정부교정시설 : 경기북부 법무타운 + 공공주택 + 청년창업지원 공간
부산원예시험장 : 테마파크형 복합물류센터 + 공공주택 + 청년창업지원 공간

③ (향후계획) 새로운 정부를 맞이하여 보다 적극적인 국유재산 활용방안 마련 중으로, 금년 8월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할 계획

- 주거·창업·상업지원 등 기존 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새로운 정책과제를 발굴해 나갈 계획

- 민간참여개발제도 활성화, 지자체와의 협력 확대, 기획재정부의 국유재산 관리·처분 총괄청으로서의 기능 강화 등 다양한 과제를 검토 중

- 신정부 출범과 함께 요구되는 정책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, 국민 삶의 질 제고 등을 위해 국유자산을 적극 개발해나갈 것

② 주요국 22년 예산 동향(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)

- 최근 발표된 미국('23회계연도('22.10.1~'23.9.30)), 캐나다('22-'23회계연도('22.4.1~'23.3.31)), 호주의 예산안('22-'23회계연도('22.7.1~'23.6.30))의 주요 방향
 - (미국) 재정지출 규모는 전년 대비 600억 달러 감소(5.85→5.79조 달러), GDP 대비 연방정부 채무비율은 0.6%p 하락(102.4→101.8%)
 - 일자리 창출, 글로벌 위협 대응 및 미국 리더십 회복, 재정건전화* 등에 중점
 - * 재정건전화를 위해 법인세율 인상(21%→28%) 및 상위 0.01% 고소득층에 대한 부유세(최저세율 20%) 신설 등 추진 계획
 - (캐나다) GDP 대비 재정지출 규모는 전년 대비 3.1%p 감소한 15.8%, GDP 대비 재정적자, 연방채무 비율은 지속적 하락 전망
 - * GDP 대비 재정적자(%) : ('21~'22회계연도) △4.6 → ('26~'27회계연도) △0.3
GDP 대비 연방채무(%) : ('21~'22회계연도) 46.5 → ('26~'27회계연도) 41.5
 - 일자리 확충·성장*, 주택가격 안정화**, 기후변화 대응 등에 중점
 - * 민간자본 유치를 위한 성장기금 설립, 저탄소·신기술 육성에 투자 등
 - ** 금융 조성 통한 주택 공급사업 등 주택공급 확대, 생애 첫 주택 구입자 자금 지원 등
 - (호주) 지출은 전년대비 5% 감소한 6,285억 호주달러, 재정수지는 지속 개선되고 채무는 당분간 증가하다가 안정될 것으로 전망
 - * GDP 대비 재정적자(%) : ('21~'22회계연도) △3.5 → ('25~'26회계연도) △1.6
GDP 대비 총 채무(%) : ('21~'22회계연도) 39.5 → ('25~'26회계연도) 44.7
 - 경제 강화*, 생활비 부담 완화**, 필수 서비스 보장 등에 중점
 - * 소기업 디지털화, 직업훈련, 숙련 노동자 이주 장려, 제조업 현대화 등
 - ** 임시적·선별적 생활비 지원 패키지 운영, 유류세 감면 등 통해 생활비 부담 완화

<주요국 재정지표>

(단위 : %)

	재정수지(GDP 대비 %)			국가채무(GDP 대비 %)		
	'21-'22	'22-'23	'23-'24	'21-'22	'22-'23	'23-'24
미국	-12.4	-5.8	-4.5	99.7	102.4	101.8
캐나다	-4.6	-2.0	-1.4	46.5	45.1	44.5
호주	-3.5	-3.4	-2.4	39.5	42.5	44.6

- (시사점) 미국·호주·캐나다는 전년 대비 지출 규모를 축소하는 등 재정건전성 회복에 주력하면서도 경제성장을 위해 투자 강화, 일자리 창출 등 노력

③ 주요국의 중기재정운영계획 운용현황(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)

- 주요국(영국·프랑스·독일·미국·일본)은 계획의 형식과 계획대상기간은 다르나 재정수지, 채무에 관한 중기 재정전망과 목표를 제시
 - (영국) '지출검토(Spending Review)'를 통해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자금을 배정하고 다년도 부처별 지출한도와 달성목표를 설정
 - 지출한도 초과 시 소관 부처 장관은 재무부에 초과 규모·원인·시정 조치를 서면으로 설명할 의무
 - (프랑스)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2년마다 재정수지·국가채무의 목표 및 전망, 재정지출 한도를 담은 법률* 형태의 중기(5개년)재정계획을 수립하고, EU 협약에 따라 유럽집행위원회에 향후 3년 간의 재정계획을 제출
 - * 「공공재정계획법(Loi de programmation des finances publiques, LPPF)」
 - 단년도 예산계획은 중기재정계획이 정한 지출한도, 재정수지·국가채무 증가율 목표치에 기속
 - (독일) 매년 예산안과 함께 중기(5개년)재정계획*을 의회에 제출하고, 유럽집행위원회에 향후 3년 간의 재정계획을 제출
 - * 의회에서 의결, 채택되는 문서는 아니고 예산 심의과정에 예산안과 함께 논의
 - (미국) 중기재정계획을 독립적이고 종합적인 형태로 발표하지는 않으나, 행정부와 입법부가 각각 중기 재정전망 발표
 - 행정부는 본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당해 회계연도와 이후 4개 회계연도의 수입·지출 등 중기 전망을 발표
 - 의회는 예산결의안*에 향후 5년 간 연방 예산 총규모 등 중기전망을, 의회예산처(CBO)**는 향후 5년, 10년의 예산과 경제에 대한 전망을 발표
 - * 상임위에 예산 가이드라인을 제시 ** 의회의 입법활동을 지원하는 보조기관
 - (일본) 매년 「경제재정 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」을 통해 단년도 경제정책의 큰 틀과 구속력이 없는 3년 단위 중기재정전망을 발표
 - '21년 발표된 중기재정전망은 중앙정부·지방의 '25년까지 재정수지 흑자 전환, GDP 대비 채무의 안정적인 하락을 목표로 제시
- (시사점) 중기재정계획은 국가별로 설정기간, 법적구속력, 목표 등에 있어 다양하게 운용되고 있으나,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국가별 주요한 재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한 방안으로 활용

④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주요국의 지원 정책과 시사점
(KOTRA 글로벌공급망실장 이금하)

- ① (논의배경) 미-중 패권 다툼으로 경제 안보가 부상, 이어진 코로나19 팬데믹, 러-우 사태 등으로 전 세계적으로 공급망 리스크 대응 필요성이 대두
- 한국 역시 '19년 일본 수출규제, '21년 하반기 요소수 품귀 현상으로 공급망 안정화의 필요성을 절감
 - * 新정부 공약 : 핵심 원료 및 부품 공급망 안정적 확보
- ② (국제동향) 반도체·배터리 등 분야를 중심으로 자국·역내 공급망 강화 중
- (미국)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공급망 행정명령으로 반도체, 배터리, 주요 광물 등 분야 국내 투자 강화
 - * 미국 내 반도체 제조라인 건설을 위해 민간과 공동으로 800억 달러 규모 투자, 대용량 배터리 원자재 및 소재 가공 분야에 30억 달러 규모 투자
 - 향후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미 연방 정부 제품 구매·조달의 미국산 비율을 높이고,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
 - (EU) 역내 공급망 연합 구축 프로그램인 IPCEI 통해 반도체·배터리 등 핵심 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역내 공급망 구축 중
 - 최근 발표된 공급망 실사법*은 新무역장벽으로 기능할 우려
 - * EU 및 제3국 기업에 공급망 전 과정의 인권·환경 관련 잠재적 위험요소 파악, 예방·완화 조치 이행 및 결과 공개 등 의무 부과
 - (일본) 반도체 분야 등을 육성하고, 연구개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경제 안전보장 기금을 설치하고, 특정 분야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경제안전보장법('22년 5월 통과)을 제정
 - (중국) 첨단산업 내수시장을 확대하고, 부품·장비를 내재화*하는 등 자국 내 공급망 구축 추진
 - * 전문제조사로부터 납품받는 중간재를 직접 자체 생산
- ② (시사점) 세계 각국의 분업화가 심화됨에 따라 한 국가나 기업이 단독으로 공급망 전체를 구축하기는 불가능
- 동맹국 등 신뢰할 수 있는 국가 중심으로 공급망을 다변화하면서 특정국에 대한 과도한 공급망 의존도를 줄일 필요
 - 주요국의 자국·권역 중심의 공급망 안정화 강화 시 더욱 많은 품목이 전략물자화될 우려가 있어 폭넓은 공급망 안정화 검토 필요

⑤ 기술안보 시대에 대응하는 국가필수전략기술
(과학기술정책연구원 조용래 연구위원)

- ① (현황) 미·중의 전략적 패권 경쟁 등 국제질서 재편과정에서 안보의 개념이 국방을 넘어서 범위가 경제·기술 분야로 확장
- 미국, 일본 등 주요국은 우방국과 기술안보 파트너십을 강화하고, 미래 선도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 중
 - 우리나라는 반도체, 이차전지, 5G 등 일부 분야를 제외 시 주요분야의 기술수준*이 중국, 일본에 못미치는 추격자 입장
 - * 양자(量子)기술 수준(최고기술국 대비, %) : 중국 93.2 일본 90.4 한국 62.5
AI 기술수준(최고기술국 대비, %) : 중국 91.8 일본 88.2 한국 87.4
 - 우리 정부도 10대 '국가 필수전략기술*' 선정하고 관련산업을 육성·보호하여 기술수준을 '30년까지 최고기술국 대비 90%까지 끌어올릴 계획
 - * AI, 5G·6G, 첨단바이오, 반도체·디스플레이, 이차전지, 수소, 첨단로봇·제조, 양자, 우주항공, 사이버보안
- ③ (추진방향) 새 정부 국정목표 및 국정과제와 연동하는 과학기술안보 관련 정책 추진의 정합성과 연계성 제고 노력 필요
- 원천기술·원재료부터 최종제품·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의 약점과 강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,
 - 국가별·산업분야별로 위기를 사전에 감지하기 위한 조기경보체계(EWS : Early Warning System)를 마련할 필요
 - 최근 추진 중인 국가전략기술 육성 관련 법은 기존 산업기술 안보법 등 타법과 차별성 및 주요 시책의 중복성 등 쟁점사항을 해소할 필요
 - 법제상 논리적 문제 또는 충돌 요인에 대해 국내외 관련 법제와 비교를 통해 사전에 파악하고 보완할 필요
 - 국가필수전략기술 육성은 산업 전반에 대한 분석과 대응이 필요한 작업, → 특정 부처나 기관 단독이 아닌 다부처·다학제적 시각에서 추진 필요